## 국회에 '백골단' 부르다니…보수 결집에 막나가는 국민의힘

'12·3 계엄' 이후 추락했던 지지율 소폭 상승에 '강성 극우' 행보 윤상현 의원, 전광훈 집회 참석 '돌출행동'…당 일각 우려 목소리

국민의힘이 '12·3 계엄사태' 이후 추락했던 지지율이 최근 소폭 상승하면서 '강성 극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유로 지목했던 '부정선 거 음모론'에 동조하고, 탄핵심판과 체포영장 등 법 집행에도 거부하는 강성 지지층의 발언과 행보에 국민의힘이 발을 맞추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계엄과 탄핵 정국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면서 극우의 결집을 통해 당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 다는 판단 탓으로 풀이되지만, 보수 진영 내부에서 도 극우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국가 비상기도회'에 참석해 "3대 검은 카르텔과 대투쟁, 전쟁을 선포해야 하며, 첫째 좌파 사법 카르텔, 둘째 부패·부정 선관위 카르텔, 셋째 종북주사파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 회에 참석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거듭 고 개를 숙여 인사한 뒤 선관위를 카르텔 중 하나로 지 목하고 "우리는 정말로 성스러운 전쟁을 하고 있 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당 내 찬성 입장 의원들에게 "정권을 뺏기면 안된다"는 발언 등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돌출 행동'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근 자주 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극우 집회에는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돼 대변인직을 사퇴한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윤 의원과 관저 지키기에 동참한 조배숙 의원 등도 참석해 "공수처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행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강성발언을 쏟아냈다.

독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백골단'도 등장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지난 9일 극우테러·폭력의 상징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민주화 운동 시위대를 탄압한 사복경찰 부대를 별칭이며, 하얀 안전모를 쓰고 잔인하게 시위를 진압한 집단이다.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6일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들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기도했다. 이들 중 절반이 영남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었다.

이처럼 국민의힘의 사상 기준점이 극우로 급속도 로 기운 것은 지지율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 지율은 34%, 더불어민주당은 36%로 접전을 이뤘 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0% 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12%포인트 내려간 수치 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 답률 16.3%).

정치성향별로 보수층 지지가 63%에서 73%로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도 탄핵 소추안 가결 직전인 지난달 10~12일 조사와 비교 하면 '탄핵 찬성'은 11%포인트 줄어든 64%, '반 대'는 11%포인트 늘어난 32%로 집계됐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당 일각에서는 극우 전략이 중도층 및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전략기획특위를 발족시키는 등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한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전략기획특위는 당내 개혁, 국민 통합, 세대 확장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제10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가 열린 지난 11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참가자들이 은박담요를 덮어쓰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고 있다.

## 김용현 재판 시작 … '비상계엄' 이제 법원의 시간

서울중앙지법, 16일 숲 1차 공판 노상원·박안수 등 곧 재판 진행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주요 인사들의 재판을 잇따라 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 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있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 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법원이 공소기각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군사령관 등의 검찰 수사 단계 진술이 '오염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기에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담긴 관련자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따질 것으로 예 상된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앞서 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을 검찰이 조사를 위해 강제 인치하려 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등을, 헌재가 탄핵심판을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각각 직권남용 등 혐의 로 고발하는 등 절차 진행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 발을 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절차 진행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군과 경찰 주요 인사들의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내달 6일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조지호 경찰청 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 을 연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 됐다.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사전모의 등으로 역시 내란 중요임 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도 조만간 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 전 사 령관은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 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 고위 장성들의 재판은 모두 중앙지역군사 법원에서 진행된다. 오는 23일에는 박 총장과 여이 과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향후 재판 쟁점을 정리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연합뉴스

##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집중

## 국정조사·특검추진 여론전 준비 민감 시기 언행주의 내부 단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힘을 집 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 파면·수사와 조기 대선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던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는 달리 여권의 저항 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으로 전방위적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국조·특검 진행 과정에서 계엄 당시의 실태가 드러나면 윤 대통령 파면 당위성이 환기돼 여론의 흐름도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회 차원의 '내란 국조특위'는 이번 주 본격 가 동한다. 14일에는 국방부와 군을 대상으로, 15일에 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업무 보고가 이뤄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모든 시 민혁명 과정에선 기득권의 반항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양상"이라며 "보수 진영이 결집하고 있으니 우 리도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잘 관리하고, 신중하게 대응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역시 여권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재발의, 이르 면 14일 처리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나, 14일부터 매주 두 차례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도 탄핵 정국의 여론 흐름을 바꿀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선 민감한 시기의 여론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언행 주의' 등 내부 단속에도 적 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